

# 전남도 공직 기강 확립 '헛구호'

수산과학원 직원 연구비 착복 등 비리 잇따라

연대책 임제 失效 ... 청렴도 4위→15위 추락

전남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상급자 연대책 임제' 등 강도높은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무원 비리 사건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는가 하면, 자체 감사 기능도 험담을 노출하고 있다.

◇공무원 비리 잇따라=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15일 감태 양식 기술이 전을 대가로 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연구활동비 4600만원을 훨씬 넘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상급자 연대책 임제' 등으로 6000만원을 빼돌려 유흥비와 부서 회식비로 쓴 장흥지소 공무원이 구속돼 상급자인 해당 사업소장이 직위해제되고 당시 해양수산 과학원장은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전남도에서도 지난 5월 6급 공무원이 사방에 건설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정역 2년6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산하기관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도 직원 인사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겨울철 전북 멍석감인 김태 연구가 2008년 성공하자 양식업자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고 그 대가로 판매 대금의 30%를 쟁取 혐의다. 김씨는 그동안 1800여만원, 뒤에는 2100

여만원을 챙겼고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 어업인 등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비를 훨씬 넘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해양수산과학원의 경우 지난 7월에도 어민에게 지급해야 할 수산사업 연구비 등으로 6000만원을 빼돌려 유흥비와 부서 회식비로 쓴 장흥지소 공무원이 구속돼 상급자인 해당 사업소장이 직위해제되고 당시 해양수산 과학원장은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전남도에서는 지난 5월 6급 공무원이 사방에 건설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정역 2년6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산하기관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도 직원 인사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백악(百藥)이 무효(無效)=전남 도는 지난해 11월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자는 취지에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동료의 부패 행위 확인·방조도 징계 대상'이라는 점을 명문화하는 한편, 지난 3월 금품·향응 수수 비위 공직자를 공직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다. 한발 더 나아가 지난 5월에는 소속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의 비위 행위로 사법기관에 구속될 경우 담당 부서 직속 상급자는 즉각 직위해제하고 차상급자의 경우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하는 연대책 임제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도 불구하고,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져 '백악(百藥)이 무효(無效)'인 셈이다.

이 때문인지 공직사회 청렴도도 크게 하락했다. 전남도는 지난 2009년 종합청렴도(8.98점) 4위에 올랐지만 2010년 8.38점에 머물러 16개 시·도 중 12위로 하락한 뒤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는 8.32점으로 16개 시·도 중 15위로 추락했다.

특히 올해 민원인 등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의 경우 지난해 9위(8.57점)

에서 14위(8.45점)로 '급락',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내부 직원이 평가한 청렴도도 8.06점(13위)으로 지난해(7.84점·13위)와 비슷했다. "일부 공무원의 비리로 전체 공무원을 짚어내 비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공직 사회 내부 목소리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부실한 감사 기능 보완해야=전남도는 올해 초 해양수산과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업무 전반에 걸쳐 이뤄진 종합 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에서 적발된 횡령 등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기관과 달리 계좌 주적 기능 등이 없는데다, 서류만으로 허위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게 전남도 감사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기 짜이 없는 감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각에서 '온정주의의 감사', '형식적 감사'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공직사회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감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축산업 허가제 도입·농정자금 연리 1%로

### ■ 새해부터 바뀌는 전남 농정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고 농업정책자금 이자율이 1%로 인하되는 등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농정시책들이 새해부터 많이 바뀐다.

전남도는 15일 농정·친환경농업·식품유통·축산 등 4개분야 33개 농정시책이 새해부터 일부 또는 전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정분야=내년부터 농촌평균임금을 고려해 농가 도우미 지원액을 1일 4만원, 기간은 45일까지로 상향 지원한다.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대출이율을 연리 1%로 낮춘다.

또 정부 정책자금인 '농업종합자금'도 연 3% 대출이율을 연 1%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출금 거치기간 최대 3년간의 2% 이자 차액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수미 표시 품목을 배추김치(찌개용), 네치, 복리, 참돔, 미꾸라지, 베랑어, 낙지까지로 확대한다.

◇녹색축산 분야=축사화재 발생 시 전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전업 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긴급 경영회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업 허가제를 새로 도입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은 우선 시행하고 가축사육 농가는 사육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가축소유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시장·군수에게 고용신고를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교육과 소득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제역에 대한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의지를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농가는 구제역 예방약품 50%를 부담해야 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현화하는 안철수 원장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빈소에서 현화하고 있다. 안 원장의 이날

조문은 지난 1일 강남출마설과 신당창당설을 부인한 뒤 처음으로 공개된 자리에 나타난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연합뉴스

### 고 박태준 명예회장 서울 국립현충원에 잠든다

#### 안철수 "별세 소식에 큰 슬픔"

지난 13일 별세한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장지가 서울 동작 대치동 포스코센터를 둘러 뒤 동작 국립현충원으로 결장됐다.

장례위원회는 15일 "고인의 장지가 동작동 국립현충원 국가사회유공자 묘역으로 결정됐다"며 "17일 오전 9시 30분 국립현충원에서 영결식을 한 뒤 묘역에 모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례위원회는 17일 오전 7시 발인 예배를 하고 7시30분 빈소를 떠나 고

인이 생전에 머물던 청운동 자택과 대치동 포스코센터를 둘러 뒤 동작 국립현충원으로 결장됐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는 사흘째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포스코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이외에도 서울 대

치동 포스코센터 앞, 포항 본사와 광

양 등 총 7곳에 분향소를 마련해 일반인들의 조문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까지 서울 포스코센터 420여 명, 신촌 세브란스 1500여 명, 포항 800여명, 광양 2500여명 등 총 1만2000여명의 조문객이 분향소를 찾았다.

한편 포스코 사외이사를 지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4일 저녁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빈소를 찾아 "포스코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정말 큰 기여를 한 의미 있는 기업으로, 그 초석은 닦은 분이 박태준 명예회장"이라며 "별세 소식을 듣고 큰 슬픔을 느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동성애 병역거부자 첫 망명

### 30대 남자 캐나다로 호주·독일에도 신청자

사례 중 60% 상당은 자살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군에서 동성애가 정신적 질병이자 공식적 혐오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동성애자가 성적 지향 탓에 전역한다면 구직과 학업 등 공적 생활에 진입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결점은 캐나다의 정부기관이 우리 군의 인권침해 실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율리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미 작년 한 동성애자가 병역거부를 위해 독일 정부에, 올해도 또 다른 동성애자가 호주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0년간 국내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받은 경우는 1만5000명에 달하고 작년말 기준으로는 965명이 수감 상태였다.

/연합뉴스

## 강운태 "내년엔 청렴도 1위 달성"

### 비리 공직자 퇴출 '원아웃제' 실시



리고 시의회  
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  
다.

한편, 광주  
시는 국민권  
익위원회가 전국 670개 공공기관  
을 대상으로 시험 공직자를 평가해  
내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반드시  
1위를 하자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비리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면서 비리를 일으킨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아웃제를 실시할 것을 감사관실에 지시했다.

또, 회계·계약, 인사를 비롯한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시정이 시민들에게 신뢰받도록 하고, 시민과 시민단체 그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 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민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여성가족부 인정**

**2012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2년 1월 9일(월) ~ 2월 14일(화)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접수기간 :** 2011년 12월 23일(금)까지

**■ 모집대상 :** (2 학년에서 1개월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류 :** 22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족)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회당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사진 2매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